

폐놀사태 이후 6개월째, 정부·기업 그동안 뭘했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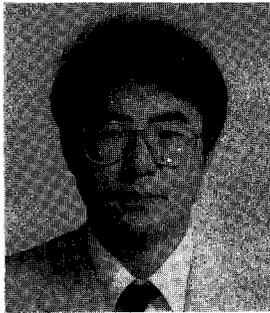
洛東 강폐놀사태가 일어
난지 이제 6개월째
접어들고 있다.

嶺南지역 1천여만명의 주민
들에게 엄청난 정신적 피해 및
고통을 주었고 斗山이란 건설한
중건재벌그룹에게 치명적타격
을 주기도 했지만 우리나라 環境史의 획을 긋는 분수령으로
평가되는 사건이었다.

그동안 뒤돌아 볼줄 모르고
개발·성장만 부르짖던 정부·
기업에게 환경보전의 중요성을
일깨워 주었고 이를 계기로 국
민들의 환경의식도 한층 높아졌
다.

예전에 자주 볼 수 없었던 각
종 환경정화캠페인이 수없이 펼
쳐지고 있다. 또 기업주들은 환
경오염문제를 소홀히 다룰 경우
기업의 존망이 좌우될 수도 있
다는 인식을 갖게 되기도 했다.
정부도 이 사건이후 환경오염사
범에 대한 제재규정을 대폭 강
화했고 환경개선을 위한 대책들
을 붓물터지듯 쏟아내 놓고있
다.

그러나 사태가 일어난지 5개
월이 지나 반년째가 되고있는
지금 가시적효과가 나타나고 있
는지에는 의문이 많다.



金炳秀
(서울경제 사회부기자)

기업의 폐수방류는 여전히 이
어지고 있으며 정부의 각종대책
은 빈수레가 요란하다는 말을
입증이라도 하듯 결실을 맺지
못하고 있다.

우선 기업을 보면 환경처 및
市·道 단속반원과의 숨바꼭질
은 계속되고 있다. 폐놀사태는
그저 재수없는 사례였을 뿐이란
의식도 다시 팽배하고 있다. 환
경처가 발표한 환경오염업소 단
속실적을 보면 폐놀사태직후인
4월에는 단속대상 2천3백22개업
체중 3백38개업체가 적발된데
비해 5월에는 2천 1백80개업체
4백46개업체가 적발됐고 이후
비슷한 추세가 이어지고 있다.
3~4월중 거의 적발되지 않던
대기업들도 위반업소명단에 다

시 등장했다. 기업들이 단속원
의 눈길만 피하면 된다는 안일
하고 수동적인 인식을 버리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로 받아들여
진다. 당연한 결과겠지만 주요
하천의 수질도 전혀 개선되지
못했다. 지난 6월중 洛東江의
오염도는 BOD(생물화학적 산
소요구량)경우 지난해 동기간
보다 대부분 크게 높아졌다. 환
경처측에서는 가뭄탓으로 돌리
고 있지만 그것만이 전부라고
보는 것은 어렵다는 지적이 높다.

물론 기업측으로서는 최근 몇
년간 임금상승, 돈가뭄 등으로
경영여건이 순탄하지 않은 상
황에서 새로운 비용상승이라는 부
담을 안고 환경부문투자를 대폭
확대하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그러나 국내·외적 여건은 기업
들이 환경부문투자를 늘리지 않
고는 존립할 수 없도록 몰아가
고 있다. 이를테면 80년대후반
이후 국제사회에서 핫이슈가 되
고 있는 온난화현상, 오존층파
괴, 種의 보존 등 전지구적 환
경문제는 기업들의 이 부문에
대한 대폭적 투자증대를 불가피
하게 하고 있다. 프레온가스 대
체물질개발에 뒤져있는 국내기
업들이 머잖아 큰 타격을 받게

될 것이란 점은 누구나 인정하는데서도 볼 수 있듯이 지구환경문제가 선진국의 정치·경제적 전략수단으로 이용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또 국내에서는 최근 수없이 터지는 크고 작은 환경사고가 그동안 누적되어 온 환경오염결과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만큼 악화된 오염상태가 기업에게 선택 여지가 없는 상황을 강요할 게 뻔하다.

정부의 각종환경규제기준강화, 오염자부담원칙적용 등은 정해진 수순일 수 밖에 없다.

결국 기업은 이제껏 피동적으로 단속만 피해오던 차원에서 환골탈태하여 자율적인 준법 환경개선을 위한 기술개발투자증대 등 걸맞는 대응자세를 갖추어야 한다. 그리고 지금이 그러한 전환의 적기임을 인식해야 할 것 같다.

정부의 자세전환도 필요하다. 사실 폐놀사태이후 국민들은 정부가 이제 환경부문에 대해 획기적인 정책을 펴게될 것이라고 기대해 왔다. 그러나 반년도 채 못지나 그같은 기대는 물거품처럼 사라져가고 있다. 붓물터지듯 쏟아졌던 각종 대책들도 눈가림식의 전시행정으로만 끝날것이란 비난이 높아지고 있다.

하·폐수종말처리장의 대거 증설, 광역쓰레기매립장건설 등 조치를 발표만 했지 전혀 예산의 뒷받침을 받지 못하고 있으며 오염유발부담금제와 환경



폐놀사태이후 국민들은 정부가 이제 환경부문에 대해 획기적인 정책을 펴게될 것이라고 기대해 왔다. 그러나 반년도 채 못지나 그같은 기대는 물거품처럼 사라져가고 있다. 붓물터지듯 쏟아졌던 각종 대책들도 눈가림식의 전시행정으로만 끝날것이란 비난이 높아지고 있다.



투자재원마련방안을 주요골자로하는 환경개선투자 촉진법, 폐기물예치금제 등은 환경처와 기획원, 상공부 등 타부처와의 견해차이로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다.

환경사범에 대해 강화된 법칙은 오염위반업소가 속출함에도 적용사례가 없어 개선이라는 인식을 심어주지 못하고 있는 것도 같은 맥락으로 이해된다. 다시 말해 정부의 정책의지가 희석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日本의 경우 환경문제가 세계적 관심사로 대두되자 지난 89년 平成元年을 「環境元年」으로 선포하고 재정투자를 확대하고 있어 정부의 귀감이 될 만하다.

환경에 관한한 이세대가 훼손해서도 안되지만 훼손할 권리도 사실 없다. 이 세대는 단지 이용만 할 수 있을뿐 고스란히 다

음세대에 물려주는게 주어진 의무라고 할 수 있다.

깨끗한 물과 공기가 다음세대의 행복과 건강을 좌우할 관건임에는 두말할 나위가 없기 때문이다. 네팔북쪽 티벳인근의 훈자지방이나 蘇聯변방 코카서스의 압하지방, 中美의 빌카밤바지방 등은 세계적인 장수마을로 알려지고 있다. 학자들은 장수의 비결을 캐낼려고 안간힘을 쓰다시피하고 있는데 일부학자들은 그 지방의 맑은 물과 공기가 장수의 비결이라고까지 주장하고도 있음은 물과 공기의 중요성을 새삼 일깨워 준다.

그러나 안타깝게 지금 이순간도 우리의 자연이 마구 파헤쳐지고 있는 엄연한 현실을 우리는 목도하고 있다. 閑麗水道만 해도 27곳. 27만5천8백6㎡가 개발, 골재채취 등의 명목으로 파헤쳐져 절경이 사라질 위기에 있는 등 도처에서 보존가치를 가리지 않는 각종 개발이 진행되고 있다.

환경에 대한 투자는 당장 눈에 보이는 이득을 낳지는 않지만 계산할 수 없는 외부효과를 창출한다. 그래서 그만큼 정부의 역할과 기업의 사회환원차원의 투자가 강조되기도 한다.

洛東江폐놀사태가 6개월째 접어든 지금이야말로 그때의 경험과 각오를 되살려 정부·기업·국민모두가 환경에 대한 자신들의 태도를 진지하게 곱씹어 보아야 할 시점인 것 같다. ▣